

5·18 전국화·세계화, 청년·청소년이 기념행사 만든다

42주년 기념행사 '5·18 겪지 않은 세대'가 기획·운영 맡기로 진상규명 헌법전문 수록 등 기조 결정...온라인 콘텐츠 사업도

42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가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직접 만들어가는 오월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광주의 청소년이 전국과 세계로 나아가고, 타 지역이나 외국의 청년들이 광주를 거쳐 다시 전국과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5·18의 전국화이고 세계화라는 점에서, 그 주인공인 청년과 청소년이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도에서이다.

20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최근 전반기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기조와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기조는 ▲진상규명 헌법전문 수록 ▲광주의 오월이 변화된 세상·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두의 오월로 ▲다시, 오월에 서 통일로 등이다.

이 기조에 맞춰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5·18기념행사를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5·18기념행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기획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18기념행사의 꽃인 전야제는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5·18전야제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로 시민 참여형으로 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오월풍물극을 조화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남로에 각계 각층의 참여형 부스(체험, 교육, 문화공연, 주먹밥 나눔 등)를 설치하는 한편, 5·18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민주평화대행진'은 5월

가두행진 재현을 통해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시대적 가치와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 14일 또는 21일 민주광장에서는 1980년 5월 민주대성회 재현을 통해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이 시대 민중의 요구를 표출하고, 공론화하는 연대의 장도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여순항쟁을 주제로 제42주년 기념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전야제뿐만 아니라 5월 한달동안 민중, 노동, 여성, 청년, 학생, 장애, 실업, 문화예술 등 각 부문 대회를 개최해 시대적 과제와 부문별 요구를 표출하는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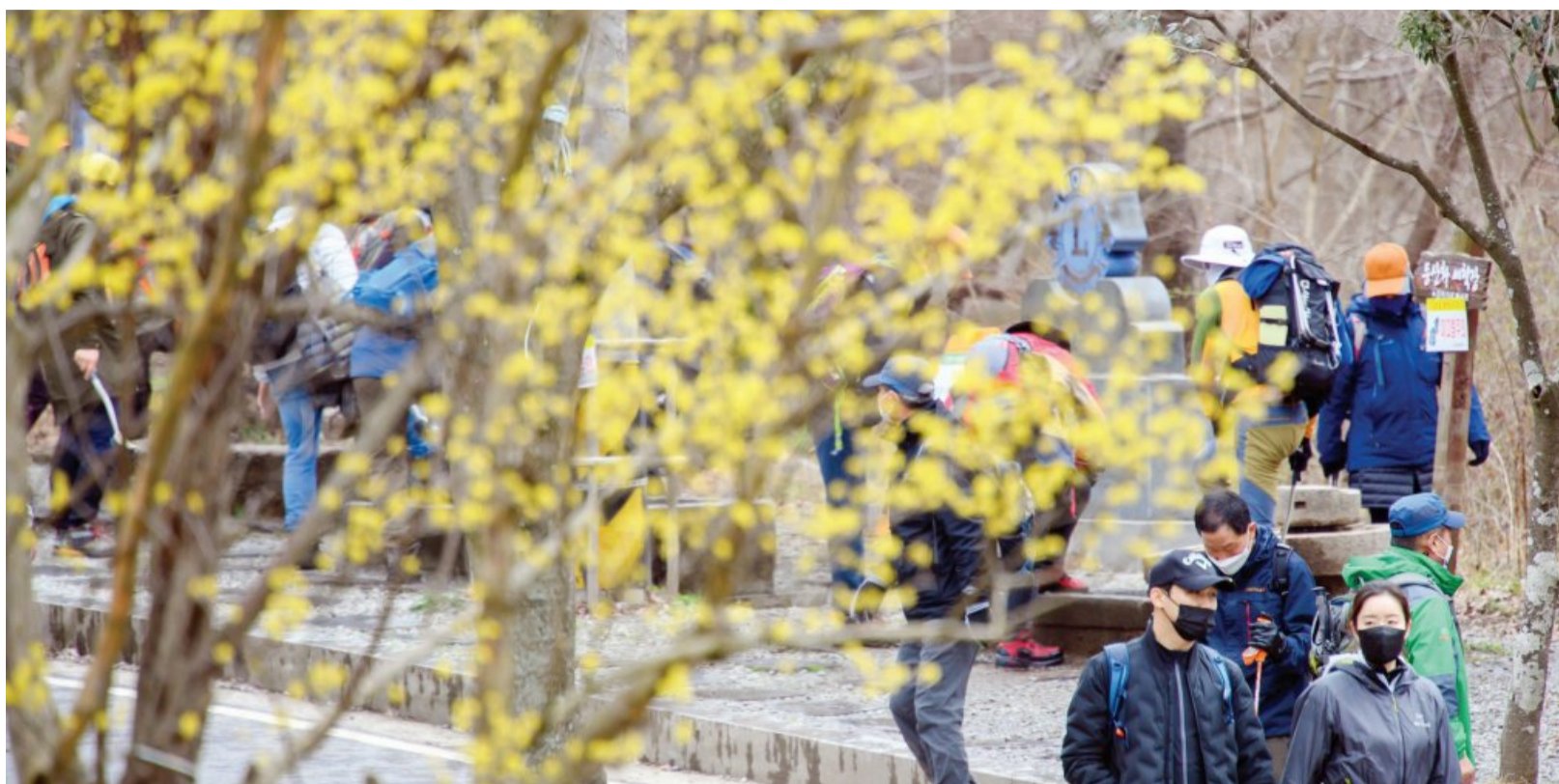
5·18전국화의 일환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을 수립한 지역(서울, 전남, 전북, 충남 등)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협력지원을 하는 한편, 광주공동체 마을단위 5·18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별 5·18행사위원회 협력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게 행사위의 설명이다.

5·18콘텐츠 생산·공유·확산을 통해 5·18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 전국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도 진행한다.

5·18기념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진행되는 5·18기념행사들도 마련된다.

오월공동체 정신의 상징인 주먹밥 만들기 체험 및 나눔행사 뿐 아니라 청소년이 5·18기념행사의 단순 참가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5·18정신 계승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향기로운 산행 휴일인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무등산 등산로가 산행을 즐기려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내부거래 감추려 13개 계열사·친족 보고자료 누락...사위 회사 누락 숨기려 딸 혼인신고일 은폐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에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김 회장은 또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

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온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해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계열편입 기준일은 법정 혼인신고일이다.

김 회장은 동사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정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

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 차례 소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 대상을 찾아 계열편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1인 여성가구 '안심 프로젝트' 추진

광주 남구가 범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0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범죄에 노출된 1인 여성가구에 도어락과 방범창, 방범 방충망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며 "관내 17개동에서 안심 프로젝트 지원대상 가구를 추천받아 30여세대에 방범시설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은 최근 3년간 관내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남구 관내 여성 1인가구는 1만2764명에서 2019년 1만3433명으로 669명(증가율 5.2%)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0년에는 1만415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20명(증가율 5.4%)이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관내 여성 1인가구가 연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노후 주택 가운데 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12층에 홀로 거주하는 1인 여성가구 30여세대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북구, 중기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5곳에 5000만원 지원

광주시 북구가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북구에 있고 자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다. 신청은 북구청 또는 광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북구는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와 ▲기업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수행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중 5개 기업을 선정, 제품 제작비용의 80%(800만원 이내)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회식서 남의 등·발 만지면 강제추행일까... 유죄

회식 자리에서 허락 없이 남의 등과 발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일까. 여성 부하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발을 만진 남성 군인에게 군사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여성계와 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보

통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지난해 5월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